

우리 나라 소비자신용의 이용실태와 합리화 방안*

Consumer Credit Use and Credit Problems in Korea *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김 경 자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
Associate Prof.: Kyung-Ja Kim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소비자신용의 합리화 방안 |
| II. 소비자신용 관련 이론 | 참고문헌 |
| III. 소비자신용의 이용실태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umer credit use in Korea at the macro and micro level. For this purpose, various published data from the Korean Bank and other institutions were analyzed. The data showed that the total amount of consumer credit use has been rapidly increased although it decreased a little bi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r a while. The influencers of consumer credit use were also investigated. Finally, implications for consumer credit use in the future were suggested.

I. 서 론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이란 일반기업이 아닌 개인 소비자나 가계가 소비행위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가를 치르기로 하고 현금이나 물품, 서비스를 미리 제공받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신용을 통해 현금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혜택을 미리 누리는 것은 현금을 차용(borrowing)하는 것, 또는 빚(debt)을 지는 것과 유사하다. 신용(credit)은 무언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빚(debt)은 그와 다른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으나(Berthoud, 1990), 일반적으로 소비자신용은 생산자신용과 대별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 부문 경쟁 강화로 소비자신용의 소스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신용잔고가 이미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일상적인 가

* 위의 연구는 199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계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으며 주택을 살 때 주택융자를 얻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Choe, 1992).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 소비자 신용이 급증하였으며 주택융자의 경우에는 신용이용액수가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다(Berthoud, 1990).

우리 나라에서도 90년대 이후 소비자신용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의 확대와 할부금융업 등 다양한 형태의 신용 공여기관 등장, 그리고 신용카드 보급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19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나라의 소비자신용규모는 GDP의 50% 수준에 이른다(한국은행, 1998a).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그 증가율이 주춤하였으나 99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다(한국은행, 1999). 경제 성장과 금리안정,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시행으로 인해 이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자금운용을 위해 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했으나 점점 개인 또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비중을 늘리고 있으므로 소비자신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총민간대출금 중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한 예금은행의 총대출금액은 1983년 이후 연평균 20% 정도씩 증가해 왔다(한국은행, 1998). 대출액 대다수가 일반가계로 할당되는 주택자금 대출까지 합치면 가계대출의 비중은 1997년의 경우 예금은행 총대출액의 39.4%에 달한다. 근래에는 소매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이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광고 및 대출세일을 벌일 정도가 되었다. 개별 소비자나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신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합리적인 소득·소비관리를 위한 소비자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1997년 후반기 이후 경제위기 시기를 거치면서 소비자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바 있다. 연대보증 문제, 대출금리의 갑작스런 상승에 따른 문제,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 연체문제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파산 문제도 처음으로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이다(한국신용

평가, 1998). 이 때문에 소비자신용은 과도한 부채를 지게 하거나 충동구매나 과소비 소비를 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만을 받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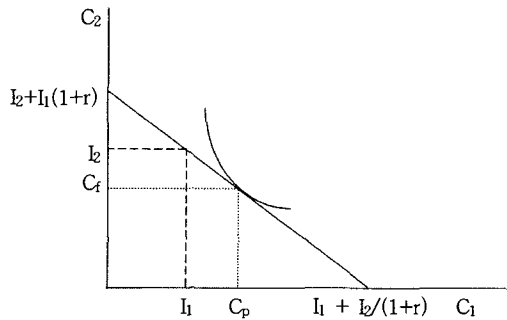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신용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소비자신용 증가는 각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자원배분 문제에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 소비자신용은 가계에 소득감소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는 물론 주택 등의 고가 내구재를 구입할 때도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소비자신용의 이용이 증가한 것에 비해 이에 대한 관련자료는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은행에서 소비자신용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6년 전인 1994년부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 나라 가계의 소비자신용의 이용실태를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간한 소비자신용 관련 문헌자료와 기존 관련 논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는 소비자신용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정보제공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소비자신용의 관련이론

소비자신용이란 미래의 소비자금을 현재의 소비를 위해 이전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부(負)의 저축행위이다. 따라서 소비와 저축에 대한 소득배분을 설명하는 기간간 선택이론(intertemporal consumer choice)을 소비자신용 이용 행동에 적용해볼 수 있다. 위 이론에서는 소비자신용 이용을 소비자들이 총생애 기대소득을 현재와 미래에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총생애효용을 극대화하려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대소득을 배분하는 과정이 저축과 부의 저축, 즉 차용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기간간 선택이론에서는 소비자가 현재와 미래의 두 기간에 걸쳐서 생존한다고 가정한다(Varian, 1992). 소비



〈그림 1〉 시간간 선택이론

자가 현재 버는 소득이 I_1 , 미래에 기대하는 소득이 I_2 이고 이자율이 r 이라면 소비자는 그 소득 모두를 현재 소비(C_1)에 충당할 수도 있고($I_1 + I_2/(1+r)$), 전부를 저축해 두었다가 미래 소비(C_2)에 쓸 수도 있다($I_2 + I_1(1+r)$). 그림 1에서는 예산선과 시간선택호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C_p 가 현재의 소비수준이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현재의 소득을 모두 소비하고도 미래소득 중 일부를 미리 할인하여 쓴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소비자는 C_1 과 C_2 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이 둘 사이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 전 생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자의 시간선택호와 이자율이다. 소비자가 미래지향적일수록, 즉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의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것을 선호할수록 무차별곡선이 〈그림 1〉에서와 같은 가파른 모양을 하게 되고 C_2 에 대한 C_1 의 한계대체율이 1보다 커진다. 이 경우 그 소비자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킨다. 반대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쓰는 것, 즉 부채를 지게 될 것이다.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재소비의 가격 상승으로 현재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축(負의 소비자신용)을 증가시키려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상승으로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감소시키려는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소비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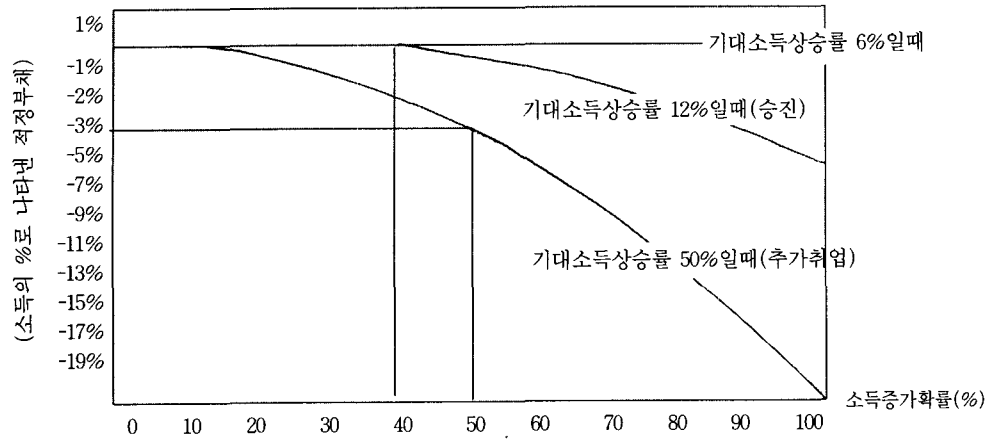
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상대적 크기가 불분명하나 채무자(빚지고 있는 소비자)인 경우에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자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Varian, 1992). Choe(1992)의 연구에서도 이자율이 소비자신용에 대한 수요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선택호와 이자율 외에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소비자의 소득상승에 대한 기대 등도 소비자의 저축 또는 신용 이용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만일 물가가 상승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미래소득을 현재로 이전시켜 현재소비를 늘리려고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신용 이용이 증가한다. 특히 이자율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할 경우 그 가능성이 더 크다(Varian, 1992). 미래소득이 증가하거나 경제가 성장하리라고 전망하는 경우에도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이전시키는 소비자신용이 증가한다.

기간간 소비자선택이론에 의하면 부채를 얻는 것은 소비자가 총생애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소득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될 수도 있다. 일정한 시기에 어느 정도가 부채의 적정선 또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다.

그러나 Fan 등(1992)은 소득이 불확실한 경우의 소비자신용의 적정선을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모델에서 첫 번째 해의 모든 부채는 두 번째 해에 모두 상환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소득 상승률이 6%인 경우와 소득 상승률이 12%인 경우(예, 승진한 경우), 그리고 50%인 경우(예, 배우자가 추가로 취업한 경우)의 세 가지 사례에 대해, 미래의 실질소득 상승률과 적정 신용규모의 관계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에 따르면 예상되는 소득 상승률이 12%이면 소득이 증가할 확률이 39% 이상일 때에만 부채를 져야 한다. 소득이 상승할 확률이 50%이고 그



〈그림 2〉 소득증가 확률에 따른 신용의 적정규모

때 예상되는 소득상승률이 50%라면 첫 번째 해 소득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Fan 등이 제시한 신용의 적정선이다. Fan 등의 모델은 '적정도(optimal)'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고 모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긴 했으나 비기업 부문에서의 신용의 적정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신용에 대한 이론들은 소비자신용이 소비자들이 기간간 자원배분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Fan의 연구에서 보듯이 소비자신용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미래소득의 상승률과 상승확률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예상되는 물가상승률과 그에 따른 소비자신용의 비용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소비자신용의 이용실태

1. 가계대출과 판매신용(거시적 분석)

소비자신용은 크게 판매신용과 가계대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판매신용이란 선구매 후지불 형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일시불로 또는 할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금을 차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소비자신용 공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신용카드와 1996년에 등장한 할부금융 제도이다.

소비자신용의 두 번째 유형인 가계대출은 일반 일반자금대출과 주택용자를 포함한 금융권 가계대출 또는 사금융을 통한 차입이다. 은행을 비롯하여 상호신용금고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소비자신용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채 등의 사금융에 의한 신용과 판매회사가 제공한 할부판매 신용 등은 통계의 미비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용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과,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 의한 신용으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한국은행 자료(1998a)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신용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하반기 이후에 그 이용액이 감소하고 있다. 〈표 1〉은 1994년 이후 7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잔액을 나타낸 것이다. 1994년 이전에는 가계대출금 자료 산출 방식이 현재와 달라 함께 비교하기 곤란하여 그 이후의 자료만 제시하였다. 1994년 말 115조 9천억 원이었던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 잔액 총액은 1997년 말 21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1998년 12월말 현재 183조 6천억으로 13%가 감소하였다. 1998년의 신용이용액 감소는 경제 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신용위험 증가로 만기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1998년의 경우 우리 나라의 가구수가 2855만 가구 정도이므로 사금융을 제외하고 가계당 평균 643만원(183,648.1억원/2855만 가구)정도의 소비자신용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자료를 가지고 각 부분별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자신용 중 가계대출이 167조원(일반자금 대출이 약 124조원, 주택자금 대출은 약 43조원)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한다. 소비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판매신용 잔액은 약 18조원으로 전체 신용잔액의 9.7%를 차지한다.

가계일반자금 대출과 주택자금 대출의 금융기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자금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공여기관은 전체 대출금의 49% 정도를 공급하는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의 저축 기관이다. 그 다음은 은행, 보험기관,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순이다.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야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예금은행보다는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대상의 금융기관이 소비자신용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자금의 경우 대출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과 할부금융사이다(한국은행, 1998b). 1997년 주택자금 신규대출 공급액은 약 6조원이었는데 국민주택기금과 할부금융사가 각각 그 중 30% 정도씩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신규 공급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1996년 이후 주택자금대출 시장에서 큰 몫을 담당해 오던 할부금융회사가 큰 폭으로 대출을 줄였다. 할부금융사는 1997년에는 2조 938억원을 공급하였으나 1998년 들어 주택경기의 위축과 고금리 등을 이유로 오히려 기존대출을 회수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판매신용 부문에서는 판매회사 할부대출로 인한 신용잔액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점차 할부금융사의 신용공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의 판매신용 총액은 17조 8천억 원에 이른다. <표 1>을 보면 1994년에 전체 판매신용 중 판매회사 신용의 비중은 61.3%이었으나 1998년 그 비중은 31.7%로 낮아졌다. 이는 신용카드 인구의 증가와 할부금융사의 설립으로 일반구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재 구입에 대한 신용공여가 본격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 1> 소비자신용 이용 실태

(연말 잔액기준, 단위: 십억, %)

내역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가계대출	100,334.0(100)	122,198.8(100)	151,029.5(100)	184,964.5(100)	167,370.7(100)
일반자금대출	72,269.3(72.0)	89,603.1(73.3)	114,381.0(75.7)	142,093.7(76.8)	123,948.6(74.0)
은행	19,740.6	22,222.3	32,341.6	42,654.1	
저축기관	35,309.6	45,612.8	56,842.7	68,464.0	
보험기관	14,434.6	18,290.0	21,035.1	25,325.8	
신용카드사	2,784.4	3,478.0	4,161.8	5,649.9	
주택자금대출	28,064.7(27.9)	32,595.7(26.7)	36,648.5(24.3)	42,870.8(23.2)	43,422.1(25.9)
판매신용	15,617.9(100)	20,548.0(100)	23,637.6(100)	26,201.8(100)	17,822.6(100)
할부금융	-	-	3,023.1(12.8)	7,269.3(27.7)	5,809.9(32.6)
판매회사	9,571.7(61.3)	12,957.1(63.1)	12,180.4(51.5)	10,004.6(38.2)	5,649.0(31.7)
신용카드사	6,046.2(38.7)	7,590.9(36.9)	8,434.1(35.7)	8,927.9(34.1)	6,363.8(35.7)
계	115,951.8	142,746.9	174,667.3	211,166.3	183,648.1

자료: 한국은행(1998b, 1999)

〈표 2〉 여러 가지 경제지표와 소비자신용 증가율

(%)

연 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지출증가율	금 리	물가상승률	소비자신용증가율*		
					가계대출	판매신용	총신용
1994	8.3	7.1	12.9	-	-	-	-
1995	8.9	8.2	13.8	4.3	21.8	31.6	23.1
1996	6.8	7.2	11.9	4.9	23.6	15.0	22.4
1997	5.0	3.2	13.4	4.5	22.4	10.8	20.9
1998	-5.8	-8.2	15.1	7.5	-9.5	-32.0	-13.0

자료: 통계청(1998a),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자신용 증가율은 〈표 1〉에서 연구자가 계산.

한편 연도별로 경제성장률과 금리, 물가 등 다른 경제지표들과 소비자신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1994년에서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가장 높고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가장 낮았던 1998년에 소비자신용의 증가율도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반가계대출보다 판매신용이 이들 거시 경제지표의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5.8%였던 1998년에 판매신용은 무려 전년대비 32%가 감소했다.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이들 지표들간의 관계를 직접 밝히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신용은 경제성장률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신용 증가율은 물가 및 금리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가 가용해야 우리 나라에서 이들 경제지표들이 소비자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가계당 소비자신용 보유실태(미시적 분석)

우리 나라에서 가계별 소비자신용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다만 통계청자료와 몇몇 연구자 개인들이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신용의 일부분에 대한 미시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199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하면서 가계당 저축과 부채보유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1993년에 그 자료를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전국 전가구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행해지는데 1996년에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가 1998년 3월에 발표되었다. 여기서의 소비자신용은 가계부채 잔액, 즉 조사일 현재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빌린 돈, 계단 돈, 월부구입 후의 미변제잔액을 포함한다. 가계별 부채보유비율과 부채보유액을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우리 나라 전가구의 66.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가계당 평균보유액은 약 716만원이다. 서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70%를 넘고 총 부채보유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기타금융, 즉 개인이나 비은행권 금융기관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할부구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액수로 보면 은행권에서 빌린 부채의 액수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표 3〉 가계별 소비자신용 보유율과 평균 보유액

(단위: %, 천원)

	전가구	서울
부채보유비율(%)	66.5	70.1
은행권	33.0	37.6
보험권	7.8	10.7
기타금융	52.2	53.1
부채잔액(천원)	7,163.3	10,694.0
은행권	3,982.9	5,305.2
보험권	439.6	740.1
기타금융	2,740.8	4,648.7

자료: 통계청(1998b), 가구실태 조사보고서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가계특성별 부채보유율과 부채보유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채보유가계의 비율이 높아진다. 하위소득 가계 20%의 부채보유율은 47.9%인데 상위소득 가계 20%의 부채보유율은 74.6%이다. 그리고 부채잔액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상위소득 가계 20%(1266만 3400원)는 하위 소득 가계 20% 부채액(286만 4400원)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 가구주 직업별로는 생산직가계보다 사무직, 사업자 가계가, 가구주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 가구주 가계가 부채보유비율과 부채보유액이 높았다. 한편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부채보유율이 가장 높았고(74.6%) 그 다음은 40대(67.2%), 20대(63.5%) 순이었다. 그러나 총부채잔액은 30대(846만 9900원), 40대(743만 5400원), 50대(700만 8700원), 60대(505만 6200원), 그리고 20대(441만 4600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 외에도 측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자신용 이용률과 보유액수를 조사한 몇몇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소비자신용 이용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목적으로 시행된 연구들이 아니고 또 각 연구마다 표본과 부채의 정의가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표 4>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소비자신용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신용잔액은 각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다가 필요에 따라 판매신용 액수와 사금융 액수를 더하여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가계당

연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수는 임정빈과 이영호(199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달 평균 31만원 정도이다.

기존 관련 연구를 보면 소비자신용을 이용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34.9%에서 82%에 이르기까지 서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가계당 평균잔액도 200만원에서 1791만원까지 차이가 커 이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문숙재 등의 자료와 통계청의 자료는 모두 전국규모의 자료를 이용한 것인데 이용한 자료의 조사연도가 각각 1993년과 1996년이라는 시간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문숙재 등의 자료에서는 그 숫자가 각각 34.9%와 1221만원이었으나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부채보유율이 66.2%이고 평균부채액이 71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3년에서 1996년까지의 그 3년 동안에 소비자신용이 널리 확대되면서 가계당 평균액수는 줄었거나, 통계청에서 부채에 포함시킨 월부잔액보다 문숙재 연구에서 부채에 포함된 사채의 액수가 다른 부채 액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영애 등의 연구자료에서 사채를 포함한 부채보유액이 평균 200만원으로 아주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번째 추론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또 통계청 자료에서는 서울 및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율과 평균부채액이 전국평균보다 높는데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성영애 등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에 비해 부채보유율과 평균부채액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외국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자신용의

<표 4>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보유율과 평균 부채규모

연구자(연도)	조사대상	소비자신용의 범위	보유율 (%)	신용잔액 (만원)	부담률** (%)
문숙재 등(1996)	전국 4009가구	금융기관 대출+사채	34.9	1,221	-
주인숙·이연숙(1996)	서울거주 763가구	금융기관 대출+신용카드 미지급액	82.0	1,791	-
심영(1998)	청주거주 343가구	차용잔액(내용 ns.)	72.0*	1,391	33.0
성영애·양세정(1995)	2976 도시가구	금융기관 대출+사채+계탄 금액	38.2	200	13.0
통계청(1996)	전국 30000여가구	금융기관대출+계탄 돈+월부잔액	66.5	716	-

* : 차용 경험률임

** : (월평균 부채상환액/월평균 소득)×100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으로 가계소득, 취업자수, 가계원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계총자산 등이 지적되고 있다(Hira, 1990; Sullivan & Worden, 1986). 대체로 가계소득과 취업자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연령, 그리고 총자산은 소비자신용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여성가구주에 비해 소비자신용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hoe(199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가계의 재산상태는 주택융자나 일반대출, 할부신용 이용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전대출(revolving credit)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4〉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관련연구에서도 개인과 가계특성이 소비자신용 이용여부와 이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서로 조금씩 다르다. 문숙재 등의 연구에서는 가구주 연령과 금융자산은 부채보유 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였고 가구주 학력과 소득은 부의 관계를 보였었다. 반면 가계의 총부채액은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과 금융자산과는 부의 관계를, 소득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액을 금융기관 부채와 사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금융자산은 각각의 부채액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근로소득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성영애 등의 연구에서는 부채보유율과 부채액은 금융자산과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소득은 부채액과는 정의 관계를 보였고, 부채보유율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가계의 신규부채 수요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최현자(1996)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과 가계원수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령은 일정수준까지는 부채수요와 정적인 관계에 있으나 그 이상에서는 다시 부적 관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우리 나라 가계의 소비자 신용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용이라는 용어에 포함될 하위요소들을 자세하게 정의하고 미시적인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소비자신용의 이용목적과 용도 그리고 이자와 기타 수수료를 합한 소비자신용의 비용도 파악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IV. 소비자신용의 합리화 방안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신용은 경제위기로 그 증가가 주춤했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해 왔다. 또한 소비자신용 증가현황을 공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신용 총액에서 주택자금 명목으로 대출되는 신용의 비중은 20-24% 내외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일반가계자금 대출의 비중은 높아지고 판매신용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할부구입 형태로 판매회사로부터 공여받던 판매신용의 비중이 크게 줄고 할부금융사를 통한 신용공여가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용공여기관이 다양해지고는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기타 저축기관에서의 신용공여 비중이 아직도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신용 이용경험이 있는 가계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통계청 자료(1998b)에 따르면 소비자신용 이용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 70%가 넘는 가계가 소비자신용을 이용하고 있고 가계당 평균 소비자신용 보유액은 1000만원 남짓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와 다른 조사자료의 평균값만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자신용 보유액은 대략 도시 가계 월 평균소득의 5배 내외이다.

이는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 평균보유액이 5.5주의 임금에 해당(Berthoud, 1990)하는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해 위험할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Garman과 Fogue(1994)는 과잉부채 신호의 하나로 3년 내에 그 가계가 부채를 모두 청산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저축률이 3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1000만원은 3년 이내에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값인 만큼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일부 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신용의 이용은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금융자산, 가구주 연령은 소비자신용 이용과 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처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신용 이용액이 일관되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직도 소비자신용을 신용사회에서의 소비생활을 위한 일상화된 수단으로서보다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용사회의 전환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다. 자료분석 결과 우리 나라에서도 소비자신용의 증가와 다양화가 계속 예상되는 만큼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계대출이나 신용카드는 잘 이용하면 가계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신용사회에서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신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본격적인 신용사회의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는 신용불량 거래자 양산, 과소비와 충동구매 조장, 그리고 불량 거래와 소비자피해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소비자신용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 소비자와 신용공여자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 상거래나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Mitchell(1990)은 '자유화와 규제완화시대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논문에서 모든 분야에서의 규제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금융산업의 특성상 이 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방안 - 그것이 자율규제의 형태를 띠더라도 - 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용카드업법, 할부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등이 있으나 주로 행정규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아주 낙후되어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문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홍승제, 1997). 이처럼 소비자신용 이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면 97년 하반기처럼 연대보증문제, 할부금융의 일방적인 여신 이율 변경문제 등 많은 소비자신용 분쟁이 발생하고 또 방치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대출상환 유예 및 중재시스템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는 소비자들이 한 번 신용을 잃었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중재해주는 제도가 거의 없다. 유일하다시피 한 제도가 연체 유예기간 제도와 대환대출제도이다. 연체 유예기간이란 금융기관이 연체된 대출금에 대한 강제회수를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인데 우리 나라 은행이나 보험회사, 주택할부금융사, 그리고 상호신용금고 등은 가계대출에 대해 30일간의 연체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외국계 은행의 유예기간 90일에 비해 1/3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다. 이 기간은 보통 우리 나라 근로소득자들의 1회 월급주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현재보다 장기화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환대출이란 개인고객의 단기 악성 채무(보통 신용카드 대금)를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긴 가계일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환시에 담보를 필요로 하는 등 극히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즘처럼 개인적 이유가 아닌 사회적, 구조적인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연체유예기간 제도나 대환대출 제도를 확대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기 이전에 소비자에게 한 번 더 구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스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정보는 합리적인 소비자선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이다.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거래약관은 아주 어렵고 복잡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가령 은행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신청사건 중 50% 정도는 신청 소비자가 오해를 했거나 법규를 잘 몰라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성봉제, 1995). 또 도시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정보요구도를 조사한 한 연구(김경자, 1998)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이자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며 이자상환방식도 거의 모른다. 또한 다른 연구(이영호 & 지영숙, 1997)도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일의 개념조차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의 정보제공은 주로 소수의 고액예금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내용도 고소득층을 위한 자산관리나 세금관리에 치우쳐 있고 일반 소비자에게 필요한 소비자신용 공여기관, 소비자신용의 각 유형별 장단점, 신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기춘과 박근주(1997)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 중 불과 1/3 정도만이 실제로 주변에서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소비자신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 제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소비자 재무상담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채무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난도, 1998).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각종 소비자신용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각종 가족상담기관, 또는 복지기관 등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내 관련학과에서 소비자상담 및 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넷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경자(1998).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금융정보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 2) 김난도(1998).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지.
- 3) 문숙재, 김순미, 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 4) 성봉제(1995). 은행과의 분쟁, 이럴때 이렇게. 더난출판사.
- 5) 성영애, 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 6) 심영(1998). 가계의 저축과 차용의 상관관계 분석. 소비자학 연구, 9(1).
- 7) 이기춘, 박근주(1997). 소비자신용 연체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 8) 이승신 외 (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 9) 임정빈, 이영호(1997). 신용카드의 자금용통성 사용목적과 가계관리. 한국가족자원경영 학회지, 1(1).
- 10) 주인숙, 이연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 11) 통계청(1998a). 한국의 사회지표.
- 12) 통계청(1998b).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
- 13) 한국신용평가(1998). 국제통화기금 체제 전후의 개인신용 정보 분석. 인터넷 보도자료.
- 14) 한국은행(1998a). 가계신용통계의 개요와 1997년 중 동향. 인터넷 보도자료.
- 15) 한국은행(1998b). 최근 소비자신용동향. 인터넷 보도자료.
- 16) 한국은행(1999). 1998년중 가계신용 동향. 인터넷 보도자료.
- 17) 홍승제(1997). 최근 소비자신용의 확대와 정책대응방안. 경제분석, 3(2).
- 18) Berthoud, R.(1990). Credit use and debt problems in the U.K.. in *The Consumer and Financial Service*. (Mitchell, J. ed.), Centre de Detroit de la Consommation and Center for Consumer Affairs.

- 19) Choe, H.(1992). An Analysis of Consumer Demand for Credit in a portfolio Context. Doctoral Thesis in Purdue University.
- 20) Fan, X. J. et al.(1992). Optimal credit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 3.
- 21) Garman, E.T. & Fogue, R.E.(1994). Personal Finance. Houghton Mifflin Company.
- 22) Hira, T. K.(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credi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165-175.
- 23) Mitchell, J.(1990). New choice - The implications of deregulation and liberalisation, in The Consumer and Financial Service, (Mitchell, J. ed.). Centre de Detroit de la Consommation and Center for Consumer Affairs.
- 24) Pollin, R.(1988). The Growth of U.S. Household Debt: Demand side influence. Journal of Macroeconomics, 10, 231-248.
- 25) Sullivan, A. C. & Worden, D. D.(1986).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consumer debt use(Working Paper No. 52). West Lafayette, IN: Purdue.
- 26) Varian, H. (1992). Intermediate Microeconomics. Norton & Company, Inc.; N.Y.